

글로벌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동향

Global Blockchain Tech, Policy & Industry Trends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CONTENTS

1. 블록체인 기반 토지기록 현대화 권고
2. 미국 AI 전략과 경제·사회적 분열의 미래
3. AI 채팅 기록이 블록체인에 저장된다면 어떨까요?
4. 엔트로픽 데이터가 보여준 AI와 일의 변화
5. 저작권을 임대하는 문화는 우리 모두를 더 힘들게 한다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동향

디지털안전지원본부 신기술안전단 블록체인정책팀

[인도]

블록체인 기반 토지기록 현대화 권고

- 인도 대법원은 등록된 매매증서의 진정성·유효성에 대한 강한 추정이 법적 안정성을 보장한다고 재확인함
- 등록문서의 변경불가능성·위조 방지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토지기록 디지털화 필요성을 촉구함

인도 대법원은 1971년 매매증서에 대해 합리적 기록과 법률 기준을 근거로 진정성을 인정하고, 모호한 주장만으로 등록문서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위조·분쟁을 줄이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 토지기록 디지털화가 시급함을 강조함

▶ 인도 대법원은 등록 매매증서의 법적 추정력과 토지 거래 안정성을 재확인함

- 인도 대법원은 등록된 매매증서에는 법적으로 강한 진정성 추정이 부여되며, 이를 단순한 주장이나 사후적 해석만으로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토지 분쟁 전반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명확히 재확인함
- 판결은 등록 절차가 단순한 행정적 형식이 아니라, 거래 당사자의 의사와 법적 효과를 공적으로 확정하는 핵심 장치로 기능하며 사후 분쟁을 예방하는 제도적 기반임을 강조함
- 법원은 등록 문서를 쉽게 무효화할 경우 토지 거래 전반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개별 사건을 넘어 부동산 시장 전체의 법적 안정성이 장기적으로 심각하게 저해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지적함
- 특히 매매증서가 존재함에도 이를 담보 거래나 명목 거래로 전환하려는 주장이 빈번해질 경우, 장기간 점유를 근거로 한 분쟁이 확대되며 사법 자원의 과도한 소모로 이어질 위험이 있음을 경고함
- 이러한 문제의식은 등록 문서의 법적 무게를 다시 강화하지 않으면 토지 분쟁이 사법 시스템 전반에 지속적이고 누적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인식에 기반함
- 대법원은 하급심이 등록 문서의 효력을 가볍게 부정한 판단은 법적 기준을 오해한 결과라고 보며, 문서의 진정성을 뒤집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가 요구된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강조함

▶ 사건의 사실관계와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게 된 배경과 쟁점 구조가 정리됨

- 본 사건은 1971년에 체결된 매매증서와 동일일에 작성된 전세계약을 둘러싼 분쟁에서 비롯되었으며, 피고 측은 형식상 매매로 작성되었으나 실제로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거래에 불과했다고 주장함
- 피고는 매매 이후에도 부동산을 계속 점유해 왔다는 점을 핵심 근거로 제시하며,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 의사가 존재하지 않았고 등록 매매증서는 외형적 장치에 불과하다는 논리를 전개함
- 제1심 법원과 항소심 법원은 매매증서의 문언, 적법한 등록 절차의 이행, 거래 당시의 조건과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질적인 매매가 성립되었다고 일관되게 판단함
- 그러나 고등법원은 동일한 사실관계를 다르게 해석해 해당 거래를 명목적 매매로 평가하며,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비추어 등록 문서의 법적 효력을 부정하는 결론에 도달함
- 대법원은 고등법원의 판단이 문서 증거 해석에 관한 기존 법리와 증거법상 요구되는 판단 기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원심 판단을 파기환송함

- 이 과정에서 대법원은 단순한 의심, 사후적 추론, 또는 점유 지속 사실만으로는 등록된 문서를 무효화할 수 없으며,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반증이 요구된다는 점을 분명히 함

▶ **증거법 적용과 구술 주장 배제 원칙을 강조하고 문서 중심 판단 기준을 재확인함**

- 대법원은 증거법 제91조와 제92조에 따라 문서로 명확히 표현된 거래 내용은 사후적 구술 증거나 당사자의 주장만으로 변경하거나 부정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함
- 등록된 매매증서는 그 자체로 거래의 존재와 내용을 직접적으로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로 평가되며, 이를 반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반론이 아닌 매우 엄격하고 설득력 있는 수준의 입증이 요구됨
- 법원은 거래 당사자의 일방적 해석이나 사후적 이해관계에 기초한 주장만으로는 적법하게 작성·등록된 문서의 법적 효과를 무력화할 수 없다고 명확히 함
- 이러한 판단 기준은 토지 거래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무분별한 분쟁 시도를 구조적으로 억제하고, 거래 당사자와 시장 참여자 모두에게 법적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는 핵심 장치로 작동함
- 대법원은 문서 증거의 신뢰성이 흔들릴 경우 개별 사건을 넘어 사법 시스템 전반의 판단 기준과 안정성 자체가 약화될 수 있음을 분명한 경고로 제시함
- 이는 단순히 본 사건의 결론에 국한되지 않고, 향후 토지 거래 분쟁 전반에서 증거 해석과 입증 책임의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려는 사법적 방향성을 담은 메시지로 해석됨

▶ **토지 분쟁의 구조적 원인과 반복적 소송 문제가 제도적으로 누적됨**

- 대법원은 인도 전역에서 토지 분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구조적 원인 중 하나로, 토지 기록의 불완전한 관리 체계와 문서 위조·변조 가능성이 상존하는 환경 자체를 명확히 지적함
- 동일한 토지에 대해 복수의 매매증서나 부속 문서가 병존하거나, 거래 이후 문서 해석이 왜곡되는 사례가 누적되면서 사법부가 처리해야 할 분쟁 건수와 판단 부담이 지속적으로 가중되고 있음
- 이러한 제도적 환경에서는 적법하게 등록된 문서조차 반복적으로 분쟁의 대상이 되며, 소송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구조적 비효율이 고착되는 문제가 발생함
- 법원은 교묘한 문안 설계나 의도적인 해석 변경을 통해 등록 문서의 실질적 효력을 약화시키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문제로 지적하며, 이는 분쟁의 악순환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 대법원은 이러한 구조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진정한 거래 당사자뿐 아니라 사법부와 행정기관 모두가 장기적인 사회적·제도적 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토지 분쟁이 제도적으로 축적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함

▶ **토지 기록 관리와 관련하여 블록체인 기술 언급의 사법적 의미와 제도적 개선 신호가 제시됨**

- 대법원은 판결 과정에서 토지 기록 관리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적 보완 수단으로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언급하며, 기존 행정 시스템의 한계를 간접적으로 지적함
- 이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 판단을 넘어 토지 기록 제도의 취약성을 사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식하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공론화한 의미 있는 사법적 메시지로 평가될 수 있음

- 법원은 블록체인이 갖는 변경 불가능성과 기록 추적 가능성이 토지 문서 위조나 사후적 조작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억제하는 기술적 특성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판단함
- 특히 매매증서 등록 이후 문서 내용이 임의로 변조되거나 삭제되는 위험을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기록 관리 방식의 신뢰성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잠재력에 주목함
- 이러한 언급은 블록체인 도입을 직접 명령한 것은 아니지만, 중앙정부와 주정부에 대해 기술적 대안을 포함한 기록 관리 제도의 재설계를 정책적으로 검토하라는 강한 신호로 해석됨

▶ 토지 기록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행정-사법 연계 강화와 분쟁 예방 필요성이 부각됨

- 판결은 토지 기록의 신뢰성이 사법 판단 단계가 아니라, 행정 시스템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확보되어야 함을 시사하며 기록 관리의 출발점을 재정의함
- 종이 문서 중심의 기록 체계는 분실·훼손·위조에 구조적으로 취약하고 장기 관리에도 한계를 드러내어, 분쟁의 반복적 발생을 행정 단계에서 누적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함
- 디지털화는 단순한 전산화가 아니라 기록의 일관성 유지와 변경 이력 추적까지 포함하는 구조적 전환을 의미하며, 대법원의 언급은 이 과정에서 기술 선택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계기로 작용함
- 행정기관과 사법부 간 기록 연계가 강화될 경우 분쟁 발생 이후의 사후적 해결이 아니라, 분쟁 자체를 예방하는 사전적 안정성 확보 중심 구조로의 전환이 가능함

▶ 판결의 제도적 함의와 향후 토지 기록·분쟁 관리 체계 재설계 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함

- 본 판결은 등록 문서의 법적 효력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하며, 토지 거래에서 요구되는 증거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사후적 주장에 의한 분쟁 확대를 제어해야 한다는 사법적 기준을 분명히 제시함
- 동시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토지 분쟁이 개별 당사자의 분쟁 행태만이 아니라, 기록 관리의 취약성과 행정 시스템의 한계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임을 지적하며 기술적·행정적 차원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함
- 판결에서 언급된 블록체인 기술은 법원이 특정 기술을 직접 설계하거나 도입을 명령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제도의 신뢰 문제를 보완할 대안적 수단에 대한 정책 논의를 촉발하는 신호로 기능함
- 결과적으로 본 사건은 사법 판단과 행정 개혁이 상호 분리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며 토지 기록 관리 전반의 체계적 재설계와 신뢰 회복을 요구하는 장기적 과제를 부각시키는 판례로 평가됨

• 본 판결은 토지 분쟁의 근본 원인이 개별 사건 판단이 아니라 기록의 신뢰성과 제도 설계에 있음을 분명히 하며, 향후 토지 정책의 초점이 사후적 분쟁 해결이 아닌 기록 단계의 법적·행정적 안정성 확보로 이동해야 함을 시사함

• 사법부가 제도적 한계를 명확히 지적하는 것만으로 행정 개혁과 정책 논의를 실질적으로 촉발할 수 있으며, 사법 판단이 기술 거버넌스 형성에 간접적 기준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보여줌

[출처]

- Verdictum, 'Supreme Court Urges Centre And States To Digitise Land Records Using Blockchain Technology To Prevent Recurring Property Disputes', 2026.01.22.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동향

디지털안전지원본부 신기술안전단 블록체인정책팀

[미국]

미국 AI 전략과 경제·사회적 분열의 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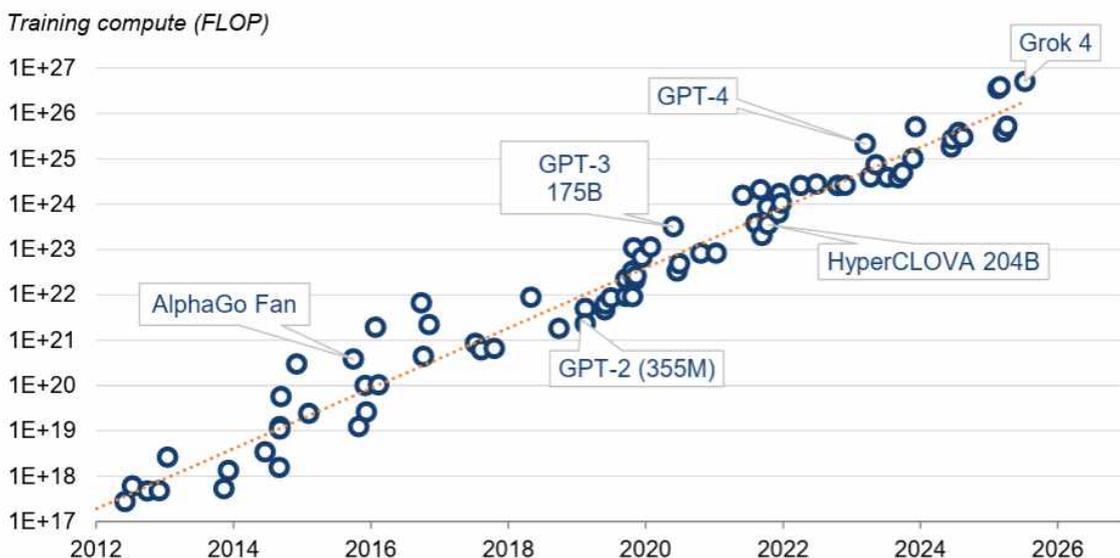
-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는 AI가 경제 성장을 가속하며 새로운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음을 분석함
- 미국이 세계 경제에서 AI 주도 성장의 혜택을 관리·조정하기 위한 선제적 정책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함

AI가 GDP·생산성에 미칠 효과와 불확실성을 실증 데이터 중심으로 검토하고, 국가별 투자성과채택 지표를 분석하여 미국이 AI 주도 세계 경제에서 우위를 유지하려는 전략을 제시하며 동시에 경제적·사회적 격차 확대 리스크 대응을 촉구함

▶ AI 연산 자원의 급격한 집중이 기술 발전의 출발 단계부터 구조적 격차를 형성함

- 최첨단 AI 모델 학습에 필요한 연산 자원 규모는 최근 수년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으며, 이러한 추세는 대규모 자본과 인프라를 보유한 소수 기업과 국가만이 최전선 개발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고착화함
- 연산 자원 투입 규모는 단순한 기술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AI 성능, 적용 범위, 확산 속도를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며, 초기 조건의 차이가 장기적 생산성 격차로 확대됨
- 보고서는 연산 자원 접근성이 AI 혁신 참여 여부를 가르는 1차 관문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이는 기술 격차 이전에 구조적 진입 장벽이 먼저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줌
- 이러한 집중 현상은 시장 경쟁을 통해 자연스럽게 완화되기보다는 규모의 경제와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 오히려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며, 격차의 자기증폭 구조를 형성함

[인공지능 모델 학습에 사용되는 컴퓨팅 파워의 양]



출처 : Whitehouse,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Great Divergence', 2026.01.21.

▶ AI 확산 효과가 전 산업에 균등하게 작용하지 않고 생산성 분화와 산업 간 격차를 구조적으로 심화시킴

- AI는 모든 산업과 직무에 동일한 생산성 향상을 제공하지 않으며, 고숙련·고자본 부문에서 먼저 활용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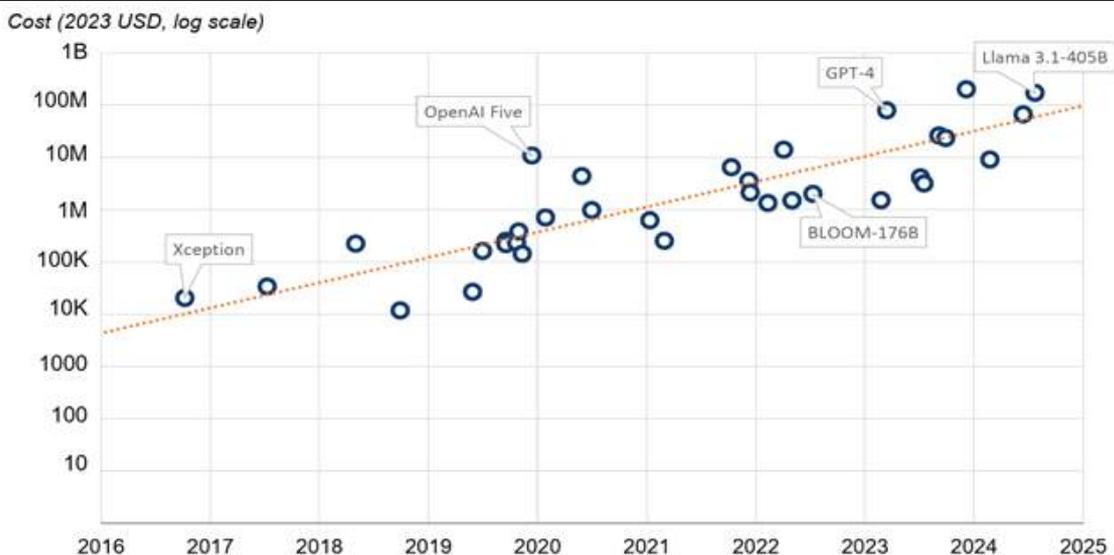
성과가 집중되는 경향이 강화되면서 산업 간 생산성 격차를 장기적으로 구조화함

- 보고서는 AI가 기존 고부가가치 부문에서는 의사결정 속도와 연구 효율, 자동화 범위를 빠르게 확대하는 반면, 저부가가치 부문에서는 제한적 보조 도구로 활용되는 경향이 반복됨
- 이러한 활용 격차는 기술 자체의 중립성 문제라기보다 조직이 보유한 디지털 전환 역량, 데이터 접근 범위, 인력 구성과 숙련도의 차이에서 비롯된 구조적 조건의 격차가 누적된 결과로 분석됨
- 특히 자본 집약적 산업과 대규모 조직일수록 AI 통합이 용이해 생산성 향상이 누적되는 반면, 소규모 조직과 취약 산업은 투자 여력 부족으로 상대적 정체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짐
- 결과적으로 AI는 경제 전반의 평균 생산성을 일률적으로 끌어올리기보다는 상위 부문과 하위 부문 간 성과와 성장 속도의 격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구조적 위험이 점차 높아짐

▶ 노동시장에서는 AI 확산과 함께 임금 분화가 심화되고 동시에 직무 구조 재편이 진행되고 있음

- AI 도입은 단순히 기존 일자리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기보다 고숙련 인력의 생산성을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며, 이에 따라 숙련도와 역량 수준에 따른 임금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됨
- 보고서는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력과 그렇지 못한 인력 간의 생산성과 성과 차이가 누적되며, 동일 산업·동일 직군 내부에서도 보상과 기회가 분리되는 노동시장 이중 구조가 강화될 수 있음을 지적함
- 반복적·표준화된 업무는 자동화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으며 상대적 가치가 하락하는 반면, 분석·조정·창의적 판단이 결합된 업무는 AI의 보완 효과로 생산성과 부가가치가 상승하는 방향으로 재평가되는 경향을 보임
- 이러한 변화는 특정 직무의 급격한 소멸보다는 기존 직무의 구성 요소가 재편되고 역할이 분화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노동자는 새로운 기술과 역할에 적응해야 하는 전환 부담을 점점 더 크게 떠안게 됨
- 그 결과 직무 전환과 재교육에 필요한 비용과 위험이 기업이나 사회보다 개인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커지며, 적절한 제도적 보완이 없을 경우 노동시장 불평등이 구조적으로 고착될 위험을 내포함

[직종 및 임금 수준별 AI 노출 현황]



▶ **국가 간 AI 격차가 기술 경쟁을 넘어 중장기 경제 성장 경로 자체를 구조적으로 분기시킴**

- AI 인프라와 고급 인재, 대규모 자본을 선점한 국가는 생산성 상승과 산업 고도화를 빠르게 가속화하는 반면, 후발 국가는 성장 동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며 장기 저성장 경로에 진입할 가능성이 커짐
- 보고서는 AI 격차가 단순한 기술 수준의 차이를 넘어 향후 국가별 소득 수준, 재정 여력, 산업 정책 선택 범위까지 좌우하는 거시적 분기점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강조함
- 이러한 국가 간 격차는 시장 메커니즘에만 의존해서는 자연스럽게 해소되기 어렵고, 오히려 기술 선도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가치 사슬과 투자 흐름이 재편될 위험을 동반함
- 결과적으로 AI 확산은 글로벌 불균형을 완화하기보다는 기존 경제 질서와 국가 간 위계 구조를 재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정책적 경고를 내포함

▶ **정책 개입 부재 시 AI는 불평등을 완화하지 못하고 기존 격차를 구조적으로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함**

- 보고서는 AI 기술 발전이 자동적으로 사회 전체의 번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가정이 성립하지 않으며, 정책 개입 없이는 소득과 기회 격차 확대 효과가 우세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함
- 연산 자원, 데이터, 인재 접근성에 대한 공공 투자와 제도적 설계가 동반되지 않을 경우, 시장 논리는 기술과 자본의 집중을 심화시키며 후발 집단과 산업을 구조적으로 배제하는 방향으로 작동함
- 특히 교육, 재훈련,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으면 AI 전환의 비용과 위험은 취약 계층과 낮은 협상력을 가진 노동자 및 기업에 집중될 위험이 큼

▶ **AI 시대의 핵심 과제는 기술 발전 속도가 아니라 제도와 정책의 대응 속도에 있음**

- 보고서는 AI로 인한 불평등 문제의 근본 원인이 기술 그 자체에 있다기보다, 기술 변화에 비해 제도와 정책 조정이 지속적으로 지연되어 온 구조적 대응 실패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함
- 기술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생산 현장에 적용되는 반면, 교육 시스템, 노동 보호 제도, 경쟁 정책은 이에 상응하는 속도로 조정되지 못하며 명확한 시간적 불일치를 보이고 있음
- 이러한 제도적 공백이 지속될 경우 AI는 장기 성장의 촉진제가 아니라 사회적 분절과 불신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커지며, 기술 수용에 대한 사회적 저항도 확대될 수 있음
- 결과적으로 AI 거버넌스의 성패는 기술 자체를 통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위험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분담하고 조정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결론지음

- AI 혁신이 경제 성장과 생산성 향상의 주요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실증 데이터로 뒷받침하면서도, 인프라·교육·규제 준비 수준의 국가 간 불균형이 격차를 확대할 잠재력이 있다는 점에서 포용적·균형적 정책 설계가 필수적임
- 미국 주도의 AI 경쟁 전략은 경제·안보적 우위를 강화할 수 있으나, 국제 규범 조화·윤리·안전 기준 마련이라는 글로벌 책임과의 균형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진화해야 함

[출처]

- Whitehouse,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Great Divergence', 2026.01.21.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동향

디지털안전지원본부 신기술안전단 블록체인정책팀

[글로벌]

AI 채팅 기록이 블록체인에 저장된다면 어떨까요?

- 중앙 서버에 저장되는 AI 대화 메모리는 개인정보 통제와 소유권 측면에서 구조적 한계를 노출함
- 블록체인 기반 권한·접근 기록 체계는 메모리 소유권과 이식성을 보장하여 개인 통제를 강화할 수 있음

현재 AI 챗봇들은 사용자 데이터를 중앙 서버에 저장하는데 이를 블록체인 기반 접근 기록 구조로 관리할 경우, 데이터 자체는 분산 저장하면서도 사용자는 접근 권한과 이력을 통제할 수 있어 프라이버시와 이식성 문제가 완화됨

▶ AI 대화 메모리를 블록체인에 기록할 경우 데이터 통제 구조가 근본적으로 재편되는 방식임

- 현재 AI 서비스는 대화 기록과 사용자 맥락 정보를 중앙 서버에 저장하며, 서비스 개선과 개인화 명목으로 장기간 보관하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어 소비자가 데이터 흐름을 직접 통제하기 어려운 한계를 가짐
- 이러한 중앙 집중형 메모리 구조에서는 해킹, 내부 접근, 정책 변경 시 대규모 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으며, 소비자는 데이터가 언제 어떻게 활용되는지 사후적으로만 인지하게 되는 구조적 취약성이 지속됨
- 블록체인 기반 접근 관리 개념은 대화 데이터 자체를 체인에 저장하지 않고, 데이터 접근 권한과 이용 이력만을 불변 원장에 기록함으로써 개인정보 노출 위험을 구조적으로 낮추는 방향을 제시함
- 이 방식에서는 실제 대화 기록이 사용자 기기나 개인 저장소에 암호화되어 보관되고, AI는 사전에 허가된 조건에서만 제한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 데이터 주권이 사용자 중심으로 재배치되는 구조가 강화됨
- 접근 기록이 블록체인에 남을 경우 소비자는 AI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자신의 메모리를 참조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기존 AI 서비스에서 불가능했던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장치로 작용함
- 또한 사용자는 특정 AI 서비스에 부여한 메모리 접근 권한을 언제든지 회수하거나 다른 서비스로 이전할 수 있어, AI 간 이동성과 상호운용성이 실질적으로 향상되는 구조적 효과가 발생함
- 이러한 메모리 관리 방식은 AI 기업이 사용자 데이터를 독점적으로 축적해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기존 비즈니스 모델과 긴장을 형성하며, 수익 구조 전반의 재설계를 요구하는 압력으로 작용함
- 결과적으로 블록체인 기반 AI 메모리 개념은 기술적 구현 가능성을 넘어 개인정보 보호, 플랫폼 종속 완화, 신뢰 중심 AI 서비스 설계라는 규범적 전환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 AI 메모리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분리·통제하는 접근은 개인정보 보호 논의를 데이터 거버넌스와 시장 구조 재편 문제로 전환시키며, 향후 AI 규제 초점을 기업 내부 관리보다 접근 권한 설계로 이동시킬 가능성을 시사함
- 사용자 주도의 메모리 통제 구조가 확산될 경우 AI 기업의 데이터 독점 기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어, 향후 AI 산업 경쟁은 모델 성능보다 신뢰·투명성·이식성 확보 역량을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더욱 커짐

[출처]

- Blockmanity, 'What If Your AI Chat Memory Lived on the Blockchain?', 2026.01.22.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동향

디지털안전지원본부 신기술안전단 블록체�팀

[글로벌]

엔트로픽 데이터가 보여준 AI와 일의 변화

- 엔트로픽 경제 지수는 AI가 많은 직무에서 부분적 업무를 맡으며 인간 노동을 보조하고 있다고 분석함
- 일부 자동화가 늘었지만 전반적 직업 폐지는 아닌 AI와 인간의 협력적 변화가 더 보편적임을 시사함

엔트로픽 데이터는 미국 직업의 절반가량이 AI를 사용하지만 대부분은 인간과 협업하여 업무를 수행하며 직업을 대체하기보다 분절·재구성해, AI가 일의 본질적 성격을 바꾸는 방향으로 노동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분석함

▶ AI는 직업을 대규모로 없애는 대신 많은 직무를 세부 태스크 수준으로 분해·재구성함

- 엔트로픽 경제 지수는 약 200만 건의 클라우드 대화를 분석해, 미국 직업의 49%가 최소 25% 이상 업무에서 AI가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AI가 업무 편의성을 실질적으로 보조하고 있음을 나타냄
- 분석에 따르면 AI는 일부 직무에서 완전 자동화보다, 인간과 협업해 문서 요약·번역·초안 작성 등 세부 업무를 처리하는 경향이 강하며, 인간 판단이 필요한 복잡 과제에서는 보조 도구 역할이 두드러짐
- 엔트로픽 보고서는 2025년 말 기준으로 클라우드에 대한 증강 활용이 뚜렷이 증가했으며, 자동화 비중은 일부 기업 환경에서 늘었으나 여전히 인간 참여가 주요 구성 요소로 유지되고 있음을 강조함
- 증가한 AI 채택 속도는 과거 주요 기술혁신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기존에 도입 수준이 낮았던 직무에서도 AI 활용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노동시장 전반에 걸친 변화가 관측됨
- 일부 직무, 예컨대 데이터 입력이나 특정 IT 지원 분야에서는 AI가 핵심 책임의 일부를 대신하면서 자동화 경향이 뚜렷해지고, 이러한 변화는 업무 단위의 분절과 재조합으로 이어짐
- 반면 복합 판단이나 대인 관계가 중요한 직무에서는 AI가 반복적 작업을 제거해 인간이 고부가가치 판단과 조정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조적 역할이 확대되고 있음
- 클라우드 활용 사례에서는 연구 요약 등 복잡 과제에서도 생산성 향상이 관찰되지만, 결과물의 품질과 실질적 활용도는 여전히 사용자 전문성과 맥락 이해 수준에 크게 의존하는 한계를 보임
- 엔트로픽 데이터는 AI 활용이 특정 직무군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산업과 직군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광범위한 업무 재설계 압력이 점진적으로 누적되고 있음을 시사함
- 이 같은 패턴은 AI가 직업 자체를 대체하기보다는 업무 내 역할과 과제 구성을 재편하며, 인간과 기계의 협력적 분업 구조로 노동의 성격을 변화시키고 있음을 보여줌

- AI 도입의 핵심 효과는 일자리 대체가 아니라 업무 단위의 재구성이며, 이에 따라 노동 정책은 고용 총량 논쟁보다 직무 분절, 인간-AI 협업 설계, 재교육 체계 전환에 초점을 맞출 필요성이 커짐
- AI 활용이 사용자 전문성과 결합될수록 생산성 격차가 확대되는 양상이 확인됨에 따라, 기업과 정부는 기술 접근성보다 활용 역량 축적과 숙련 격차 완화를 핵심 경쟁력 및 사회 안정 과제로 인식해야 함

[출처]

- Forbes, 'AI Is Transforming Jobs, Not Replacing Them, Anthropic Data Suggests', 2026.01.23.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동향

디지털안전지원본부 신기술안전단 블록체인정책팀

[글로벌]

저작권을 임대하는 문화는 우리 모두를 더 힘들게 한다

- 디지털 시대 저작권은 구독·렌탈로 사용자 권리를 제한하며 문화 접근권과 재판매 권리를 축소함
- 저작권을 임대하는 문화는 전통적 소유권 원칙을 잠식하여 소비자 및 창작자의 이익을 약화시킴

디지털 미디어는 대부분 렌트 방식으로 유통되며, 미국 저작권법의 핵심 원칙인 first sale 권리가 복제에 적용되지 않아 접근성과 공유, 이식성 문제를 악화시키고 사용자·문화 소비자가 불리한 위치에 놓이도록 만들고 있음

▶ 디지털 구독·렌탈 문화가 전통적 소유권과 권리 재판매를 축소시키는 구조적 결과를 초래함

- 넷플릭스·스포티파이·아마존 등 서비스 시대에는 저작권 작품을 디지털로만 접촉하게 되며, 소비자는 구매가 아닌 조건부 접근에 묶여 콘텐츠를 사실상 임대 형태로 소비하는 구조에 지속적으로 놓이게 됨
- 디지털 콘텐츠는 플랫폼 약관과 기술적 제한에 의해 이용 범위가 규정되며, 전통적 "first sale" 원칙이 복제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아 소비자의 복제·이전·보존 권리가 제도적으로 차단되는 결과를 초래함
- 저작권법에 기반한 재판매·대여·교환·공유 권리는 디지털 환경에서 점차 무력화되고, 이는 개인 간 공유 문화와 중고 시장, 비공식 유통 생태계의 축소로 이어지는 구조적 변화를 동반함
- 물리 매체 중심 시대에는 서점, 중고 상점, 도서관을 통해 문화가 반복적으로 유통되며 접근 비용을 낮췄으나, 디지털 렌탈 체계는 이러한 사회적 문화 인프라를 충분히 대체하지 못함
- 또한 도서관과 공공 아카이브는 디지털 콘텐츠를 소장·보존할 법적 권한이 제한되어, 장기적 문화 보존과 세대 간 접근 보장을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적 제약에 직면함
- 디지털 스트리밍 서비스는 초기 비용 부담을 낮추는 장점이 있으나, 콘텐츠가 플랫폼 간 이동하거나 서비스 종료로 사라질 경우 소비자는 대안 접근 수단을 상실하는 불안정한 소비 환경에 놓이게 됨
- 실제로 일부 영화나 TV 시리즈는 특정 플랫폼에만 제한적으로 제공되거나 품질이 낮은 상태로 유지되어, 소비자가 더 나은 버전이나 다른 접근 경로를 선택할 수 없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함
- 이러한 디지털 렌탈 문화는 콘텐츠 접근 여부를 플랫폼의 사업 전략과 계약 조건에 종속시키며, 장기적으로 문화 다양성과 이용자의 선택권을 동시에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 결과적으로 접근성과 공유 가능성이 기업의 정책 변화에 좌우되면서, 소비자와 창작자 모두가 문화 자산을 자유롭게 향유·보존·재사용하지 못하는 구조적 불균형이 고착화됨

- 디지털 저작권 체계는 소유권보다 렌탈 기반 접근을 강제하며, first sale 원칙이 복제에 적용되지 않음으로써 문화 접근성과 공유 생태계를 축소시켜 소비자의 문화 주권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 저작권법 개정과 명확한 소유권 보호는 단순히 소비자 편의가 아니라 문화 다양성, 창작자 권리 보호, 공공 자산의 보존과 이용 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한 필수적 정책 과제로 부상함

[출처]

- EFF, 'Rent-Only Copyright Culture Makes Us All Worse Off', 2026.01.22.